

울산 플랜트 노사 협상국면 전환

근로조건 향상 요구안 교섭쟁점 부각 ... 11월 6-7일 잇따라 교섭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여의치 않자 11월1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전국 플랜트건설 노조 울산지부가 파업 중에도 사용자측인 전문건설기업들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타결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11월5일 울산노동지청과 울산플랜트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11월5일 오후 4시 울산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노사 대표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 돌입 후 첫 대화의 장인 제10차 단체협상을 가졌다.

노사는 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 공휴일의 휴무 보장과 경조사 등 청원 휴가 보장, 주 40시간 근무실시 등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노조 요구안 등을 놓고 교섭을 이어갔다.

사용자측은 쟁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주 1회 휴무와 5월1일 휴무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 특성상 추가 휴무일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 40시간은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7월부터 시행 중인 만큼 50인 이상 전문건설기업은 쉽게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는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플랜트 조합원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일단 조합원이 전문건설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 28사를 중심으로 먼저 협상을 전개하기로 했다.

28개 전문건설기업은 지난해 단체협상을 체결한 동부, 제이콘, 국제플랜트 등 12사를 포함해 2007년 추가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정풍, 일양, 삼우 등 16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사는 파업 중임에도 협상을 가진데 이어 11월 6-7일 잇따라 교섭을 갖기로 하는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전국 플랜트건설 노조 윤갑인재 위원장도 협상장에서 “11월 초순까지 플랜트 노사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가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측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용자측의 관계자도 “최선을 다해서 노사협상을 잘 이끌어갔으면 한다”고 밝히는 등 노사가 남다른 타결의지를 비추었다.

그러나 국가 공휴일 등의 휴무보장, 주 40시간 근무시간 등의 쟁안은 막판 접점을 찾는데 어렵지 않지만 아직 내놓지 않은 노조의 임금요구안이나 회사의 단체협상 제시안 등에서 수용하기 힘든 안이 나온다면 분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플랜트노조는 11월5일 오전 7시부터 2시간여 가량 여천동 화학공단 일대에서 출근 홍보전을 벌인 데 이어 오후에는 신정동 태화강 둔치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파업집회를 갖고 울산시청까지 행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6>